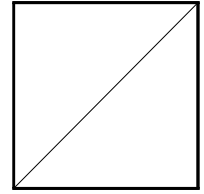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2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2. 5. 11. (제 9 차)	

2021년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5. 11.

1. 보고주문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정기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결과를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2020년 12월말 기준 44개 저축은행 대주주 283인(사)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3. 보고내용

2020.12월말 기준 심사대상자인 4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83인(사) 중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 대원저축은행의 대주주 ■■■■■■■■, 대아저축은행의 대주주 △△△, 한화저축은행의 대주주 ▲▲▲▲▲▲▲▲▲▲(주)와 (주)▼▼, 바로저축은행의 대주주 ○○○, 안양저축은행의 대주주 ◇◇◇◇, 진주저축은행의 대주주 ◁◁◁ 및 삼정저축은행의 대주주 ◀◀◀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다만, □□□과 ■■■■■■■■은 이미 주식처분명령이 부과된 상태*이며, 그 이외의 대주주들은 현재 저축은행 보유지분이 10%에 미달**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등의 조치를 부과할 실익이 없어 별도로 조치하지 않음

* 주식처분명령은 종국적인 행정처분으로 추가로 조치할 실익이 없음

** 10% 이상의 주식의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8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제9차 안검검토 소위원회(2022.5.6.) 보고

<붙임>

관 계 법 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8(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벌칙) ①~④ (생략)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생략)
 -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 6.~11. (생략)

부 칙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 ⑤ (생략)

- ⑥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및 대표자
- ⑦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및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 ⑧ 법 제10조의6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⑨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자격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주주명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별표 3] <개정 2018. 8. 21.>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제7조의4제8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 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일 것

	<p>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천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p> <p>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p> <p>다.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p>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p>

	<p>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 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라목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1. 제7조의4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라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심사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14조(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제 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 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3. 기타 경력이나 능력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② 시행령 [별표 1]에서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4배 이상을 말한다.

③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금융위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한다.

④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따른 주채무계열을 말한다.

⑤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채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 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⑥ 시행령 [별표 1]에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나목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기업경영분석중 중분류에 의한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비율 이하를 말한다.

⑦ 시행령 [별표 1]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제외한 방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 4. 7., 개정 2018. 10. 15.>

1. 유상증가

2. 1년 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⑧ 시행령 [별표 1]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⑨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주주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⑩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이라 함은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거나, 이를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⑪ 금산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당해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었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다만, 그 대주주가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대주주 적격성 심사등) ① 시행령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은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주식의 취득등에 대한 승인을 할 때에 시행령 제6조의3제4항 단서 및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적용을 제외한 시행령 별표2의 사유는 시행령 별표3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제외한다.

③ 시행령 별표3에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건전성지도기준을 말하며,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을 말한다.

④ 시행령 별표3 제1호라목4)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에 부과된 조치는 제외한다.

2. 금융기관 임직원(전직 포함)인 경우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14조제9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⑤ 제14조제8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시행령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대주주 및 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원장은 서류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양식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0. 9. 24>

제3조(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주주는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적용하고,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201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적용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감독국
연 락 처	02-2100-2993	02-3145-6777